

이태원 참사 후폭풍

與野 국정조사 이견... 경찰수사 먼저 vs 셀프조사 한계

원내대표 회동... 협치는 없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이견
각각 당내 특위 통해 현안대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태원 헬러윈 축제 참사에 따른 국가예도기간이 끝나자 여야가 다시 정쟁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협치 없이 제각각 당내 특위를 꾸려 대응하면서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 모두 당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기구를 꾸렸으나, 국정조사는 입장 차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

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필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이 발생할

당시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여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비공개 회동 이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은 지금로서는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예도기간이 끝난 지난 5일 이후 정쟁을 다시 시작한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여야는 제

각각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당내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 대책이 확보되도록 활동하겠다”고 했다.

사고조사 특위는 ▲진상조사 ▲안전대책 ▲국민안심 등 3개 소위원회를 꾸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11월 9일)과 정부 보고(11월 11일) 등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29일 당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및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부끄럽고 책임감 들지 않나”... 고강도 질문 줄줄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 출석
보고체계, 책임방식 무더기 지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린 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자괴감’, ‘국가부재’, ‘골든타임’을 언급하는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참사 사건이 2시간이 지나서,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 지나서, 행안부 장관보다도 50분 지나고 인지했다는 것인데,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책임감이 들지 않나”

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경찰 내 구조 시스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총경이 같은 지역 경찰대 출신이라고 한다. 문제인 정부 알박기 경찰 인사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내 하나회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비취볼 때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 장관은 참사 예방 못한 책임감을 느끼긴커녕 사고 축소와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는 파면감이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 바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사고 당일)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 (사고 발생) 3시간 40여분 전부터 애타게

국가를 찾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제”라며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현재 심정을 물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묻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나”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여러 가지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6시 34분 첫 112 신고 때 적절히 조치가 취해졌으면,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해 무정차 조치를 했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추궁했다. 오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시)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서초동 대통령 사저 2개 중대, 대통령실 관제 기동대 중 1개 중대만 (29일 오후) 8시, 9시, 9시 30분이라도 병력 투입됐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김광호 청장에게 지적했다. 김 청장은 “상황실에서 인지를 빨리했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다산콜센터에 시민들이 죽어간다고 보냈다”며 “그런데 왜 대응을 안하나. 지휘 체계에 따라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 왜 서울 청장은 윤 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중견기업 안정적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참석
규제혁신, 정책 등 적극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튼

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7월 5일 여성기업인, 10월 4일 스타트업·벤처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과 격려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금리·고환율의 흐름으로 안팎의 상황이

녹색지 않지만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고용, 수출액,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견기업들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 실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부품·소재 산업의 중심인 제조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규제혁신이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난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를 차질 없이 개선하겠다”며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중견기업도약지원 펀드 조성(연구개발),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

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일 뿐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며 “중견기업인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